

---

## 아산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

---

| 일 시 : 2019. 9. 26(목) 19:00 - 21:00

| 장 소 : 아산어울림경제센터 회의실

| 주 관 :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연구회, 아산시 한살림  
청년생산자위원회, 협동조합 고랑이랑



## 행사 개요

### □ 행사명

- 아산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

### □ 행사 목적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
- 각 지자체 농민수당관련 제도 도입 현황 및 쟁점 논의
- 아산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 논의

### □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저녁 7시
- 장소: 아산어울림경제센터 회의실(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3)
- 주관: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연구회, 아산시 한살림 청년생산자위원회, 협동조합 고  
랑이랑

### □ 발표 및 토론 <사회: 김영세(아산시 한살림)>

#### 1) 발표

- 주제 발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2) 토론

- 이종명 : 송악교회 목사(전국 농목연대 위원장)
- 김재길 : 아산농민회 회장(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 김태형 : 한살림 아산연합회 청년위원장, 고랑이랑 이사장

- 참석자: 약 20명(아산시 농민, 의회, 농업관련 단체 등)

### □ 진행 순서

- 19:00-19:10 개회
- 19:10-20:00 주제 발표
- 20:00-20:30 지정토론
- 20:30-20:50 종합토론
- 20:50-21:00 마무리 및 폐회

## 목 차

### □ 주제 발표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 ----- 00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 토론 발표

- 토론 1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제안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읽고 --- 00  
**이종명** 송악교회목사, 감리교농목회장
- 토론 2 : 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기본소득제 ----- 00  
**김태형** 한 살림아산연합회 청년위원장



<주제 발표>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 론 문

---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제안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읽고

이 종 명

송악교회목사, 감리교농목회장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조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며, 창조주는 인간에게 하늘과 대지, 바다와 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온갖 동식물을 선물로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경제적 자산을 개인이 혹은 집단이 소유하게 되면서, 이것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구분되고 이것이 세습되면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이제 인류가 공동으로 축적해온 현재의 경제적 자산과 미래의 생산물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생동안 생활비로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인류의 오랜 꿈인 태초의 에덴동산-지상천국(유토피아)을 회복하는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할 이유는 수 백 수 천 가지 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오며, 정치혐오와 좌절, 불안심리를 불러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종말(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본소득제를 미래 우리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값진 일이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제시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화(공업 중심)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국제교역을 강화,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 현재의 농촌(농업)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생명 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발제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우리사회 각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다양한 현장에서 실현되어가기를 희망한다.

본 발제의 농민기본소득제 3가지 모델중 특히 의미있는 것은 ‘농촌단위(자연부락단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체계를 강화(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나라 농업은 자연 생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있다. 농촌지역에서 마을은 단순히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만이 아니라 농사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공기, 여러 가지 유기물과 생태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농과 소농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지역농과 소농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을 가장 잘 지켜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은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화에 따라 생산성의 극대화, 상품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한 기업농의 경영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토종자원을 보존하고, 건강한 지역생태환경을 지켜온 지역농과 소농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촌단위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지역농과 소농을 지키고 복원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마을 주민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누구나 그 마을에 사는 한, 생태자원을 공유하고, 그 관리에 참여하는 한 농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있다. 예컨대 마을마다 핵심이 되는 생태, 토종, 경관자원을 선정하거나 발굴해서(마을숲, 둠벙, 수로, 수리부엉이, 반딧불이, 개구리, 토종농산물...) 이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제와 함께 마을 단위로 농민기본소득과 수당을 결합시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기본소득제로 나아가야할 국가 정책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당장, 그 절실함이나 효율성, 그리고 정책의지와 실현가능성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과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우리지역 아산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어느 지역보다도 신속하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기본소득제

김태형

한 살림아산연합회 청년위원장

농업은 습지보전과 경관, 물의 보존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27조원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받고 천대받아 왔습니다. 농산물은 너무 싸 농부의 인건비도 안나와 받을 갈아 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 근로자나 농업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는 농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받을 묵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천만명에 달하던 농민은 250만명으로 75%나 줄고 소득 또한 도시근로자의 절반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농민들은 ‘지긋지긋한 농사일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농촌인구는 줄어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농민에게도 농업이 지속되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업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지속돼야 합니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거나 도시민들의 귀농을 통해 농업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농인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수당은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농 3년까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귀농인들이 대부분이지요.

소작농, 영세농의 입장에서 농민수당은 농부들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에게 지급되는 쌀 직불금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소작농, 영세농이 좀 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실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농가에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농민에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모든 직불금을 통합한 뒤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한 뒤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김성훈 전 장관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